

건설업 등록 불법대여 근절대책 마련 '박차'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가 건설업 등록 불법대여 근절에 적극 나선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달 근절대책을 내용을 예정보고 건설협회는 불법대여 의심업체 고발 시스템을 가동한다.

협회는 확정 판결을 앞둔 전자입찰 해킹과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와 재발 방지에 나선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는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윤리위원회(위원장 김중구)를 개최했다.(사진)

윤리위는 이날 분회 및 시도회가 분담하는 건설업 등록 불법대여 상시고발시스템을 구축해 의심업체를 지속적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동시에 불법대여에 관여한 건축사 자격을 박탈하거나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등의 근절대책 검토도 요청하기로 했다.

이처럼 주로 협회와 업계 차원에서 이뤄졌던 불법대여 근절 조치들은 앞으로 정부차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날 윤리위에 참석한 정병수 국토교통부 사무관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협회가 해준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국토부가 등록 대여를 발붙이지 못하게 할 대책을 5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에는 건축법시행규칙 개정과 과다 착공 건설사에 대한 조사 등이 포함될 전

국토부, 다음달 대책 발표... 건설은 의심업체 고발 시스템 가동



망이다. 전수 조사에 가까운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고발업무를 국토부에서 담당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윤리위는 이날 또 전자입찰 해킹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 2013년 해킹으로 공공공사를 불법낙찰한 건설사들이 적발됐으나 대법원은 일부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이 사기죄로 공소장을 변경해 항고 및 상고했고 대법원은 올해 1월 사기 부분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전자입찰 해킹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의 확정판결만 남았으며, 향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게 됐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검찰은 또 범죄이익 환수를 위한 재산 추적과 몰수, 추징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협회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는 대로 부정당제재 처분을 해당 지자체에 건의하고 연루업체에 대한 회원 제명과 같은 제재도 추진한다. 유사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건의한다.

윤리위는 또 최근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가 시행되면 지역중소종합건설업계가 고사위기에 몰린 다며 입법예고를 철회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글=김정석기자 jskim@
사진=안윤수기자 ays77@

강원도, SOC 건설예산 확보 '올인'

원주~강릉 철도 8000억원 등 평창올림픽 관련 2.8조원 필요
崔 지사, 3차 국비 확보 보고회서 "한달간 총력 기울여달라"

강원도가 내년 국비 6조2000억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2018평창동계 올림픽을 2년 앞두고 되는 내년도 국비 확보 성과가 강원도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각오에서다.

23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오는 다음달 10일 내년도 예산(국비) 신청서 제출을 앞두고 제3차 2016년 국비 확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문순 지사는 "부처 예산 요구서가 오는 6월5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된다. 지금부터 한 달 동안은 2016년도 국비 확보 전면전을 선포하고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도의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올해(6조715억원)보다 1285억원 늘어난 6조2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2조8238억원이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비로 분류된다.

구체적으로 오는 7월에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유력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 50억원, 여주~원주 철도는 12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 원주~강릉 철도는 내년 8000억원의 예산반영이 요구되고 있으며, 내년 말 개통될 동서고속도로 동흥천~양양은 4862억원이 필요하다. 역시 내년

개통 예정인 제2영동고속도로는 1940억원, 동해고속도로는 1005억원 등의 국비가 투입되어야 한다.

동계올림픽 준비 사업비로는 경기장 건설이 2137억원, 경기장 진입도로 1973억원 등 총 4349억원의 국비가 요구된다. 항만 부문은 동해-목호항 특성화 및 인프라 구축사업비 617억원, 속초항 확충 170억원 등이 주요 확보 대상이다.

이밖에 레고랜드 진입교량 200억원, 동계올림픽특구 관광개발사업 264억원, 오색 케이블카와 직결되는 오색집단지설지구 정비 44억원 등도 국비 확보가 절실한 사업들이다.

사실 도는 내년도 국비 확보에 발 빠른 행보를 보여왔다. 최문순 지사는 지난 1월부터 국토교통부, KDI(한국개발연구원),

기획재정부 등 주요 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현안사업 해결을 건의했다.

지난 14일에도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와 여주~원주 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하반기 기본설계 착수를 건의했으며, 삼척~제진 철도사업에 대해서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여타 면제인 남북협력사업으로 조기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강원 지역의 철도사업과 고속도로 건설은 강원도민의 숙원사업이며,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핵심사업이다. 동계올림픽의 차질없는 준비와 더불어 강원도의 미래를 담보할 SOC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선 국비 확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희훈기자 hoony@